



다시 만나
반기워

벚꽃이 만개한 4월 본관의 모습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일부터 4일간, 금지된 본관놀이를 대체하기 위해 '경희 BLOSSOM'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8면>

배지현 기자 fleitjsdp@khu.ac.kr

소통, 강좌 축소…후마 둘러싼 논쟁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 5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 704호에서 우리신문 주관으로 후마구조대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문제,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폐지 및 '우사세 폐지 반대 위원회(위원회)' 해산, 교양 강좌 개수 축소, 협의 없이 진행된 대학영어 인원 증가가 주요 안건이었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 김민철 '세계와 시민' PD 교수, 고봉준 중학교 PD 교수, 고인환 글쓰기 PD 교수가 후마 측 패널로, 박리리(사회학 2016) 대장, 배호연(사회학 2017) 대원, 백하연(사회학 2017) 대원, 김보경(사회학 2016) 대원이 후마구조대 측 패널로 참석했다. 안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 교수, 교직원 약 30명이 참관인으로 토론회에 함께했다.

후마구조대는 먼저 개편 과정에 강좌 수강 대상자인 학생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

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은 "개 편안을 이미 완성시켜 놓은 뒤 학생을 참여시켜 할 수 있는 일을 없 게 만들었다"며 "과정상에서 모두 와 협의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했다"고 말했다. 이영준 학장은 "학교는 소통에 있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재도약 TF가 5월에 발족했고 활동을 시작해서 대학주보 보도를 통해 홍보를 했지만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학장으로서 미안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학장은 "모든 구성원의 협의를 받아내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학생의 대표인 총학생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통례"라고 말했다. 이에 박리리 대장은 "당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서 양 캠퍼스 한 명씩 참여했는데 과연 학생 두 명이 교직원, 교수와 수평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고인환 교수는 "앞으로 강좌에 대한 제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이야기를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 해달라"며 "머리를 맞대고 같 이 이야기 해 나가고 싶다"고 설명 했다.

위원회 해산에 대해 이 학장은 사과와 함께 설명을 덧붙였다. 이 학장은 "학장의 거친 언행으로 자존심 상했을 교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책임자의 입장에

서 날짜는 훌려가는 토론만 하 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관인으로 참석한 위원회 소속 박상용 교수는 "우사세가 없어지 기 때문이 아니라 과목이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단 한 번도 토론 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학장은 "절차상 갈등은 인정하지만 기만이라는 나쁜 의도가 아닌, 좋은 교육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발생한 일이나 의도 자체를 의심하시는 말씀달라"고 답했다.

박리리 대장은 후마구조대 측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축소된 교양 강좌 개수와 시간 강사 해고를 근거로 교양 강좌 축소를 비판했 다. 고봉준 교수는 "강좌 수가 적어

진 것이 아니라 강좌 리스트를 정리한 것이다"며 "강사를 자른 계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고 교수는 "후마 구조대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좌가 절반 가량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경 대원은 "학교에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강의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체감한 정보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 했다.

후마 구조대는 마지막으로 "후 마나름대로 학교를 발전시키려는 것엔 공감하지만 줄어든 강좌에 대한 학습권, 교육권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보이며 참관한 교수와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의 의견이 엇갈리니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마는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중단하고 긴밀하게 학교와 논의했으면 한다"며 "후마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왜곡 없는 주장을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이다. 비학위과정 수입이나 국고지원 등 등록금 외 수입 확충이 주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받을 연간 71.7억 원 규모 국고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처는 "수강료, 기부금, 산학협력단전입금, 대여사업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 수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의 2018년 교비회계 수입은 대학알리미 기준 약 5,237억 원이다. 이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이은 사립대학 5위 수준으로, 2016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순위다. 등록금 상한제 이후 사립대학 재정규모 성장률은 평균 1.5%에 그쳤지만 우리학교는 2.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 수입이다. 등록금 수입은 약 2,898억 원으로 총 교비회계 수입의 약 55%를 차지한다. 하지만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타 대와 격차가 벌어졌다.

우리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진 5개 대학 중 4위다. 재학생 수는 19,579명으로 가장 많음을 고려하면 등록금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은 작년 대비 96.5억 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전입금, 산학협력단전입금 등 23.9억 원이 감소하고 일반기부금 등 기부금수입은 45.4억 원 감소 한다.

악화되고 있는 수입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개교 70주년 기부금은 아직 발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조정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겠다는 입장



대평의 2차 입장문 '법인 제시한 규정 초안 구성원 약속 회피한 것'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대학평의원회(대평의)가 지난 9일 2차 입장문을 통해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평의는 법인이 제시한 규정 초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법인과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대평의 길재호 의장직무대행은 "지난 9일까지 규정 초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법인과 대학 본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했지만 "규정 초안에 비민주적인 독소 조항이 지나치게 많이 삽입되어 있어 수정 요구안을 만들기 조차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평의는 입장문을 통해 "법인이 제시한 규정 초안은 구성원과의 약속을 회피하고 내부 논란과 분열을 조장하여 선거를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제출된 것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이 안은 법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상식도 갖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매우 부끄러운 문서다"라고 밝혔다.

또 "법인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여 구성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에 임하는 것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다시 우리의 권고를 무시하고 편법과 지역전술로 사태를 호도하려 한 다음 즉각 전 구성원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본부는 대평의 측이 밝힌 입장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장실 김동준 과장은 "총장직무 대행이 현재 해외에 있는 관계로 추후 입장문을 검토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한편, 대평의가 "현 대평의 체제에서 새 비상 소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기준 '총장 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에 속했던 일부 구성원 단체가 "총장 선출제 논의에 누락되는 구성원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열린 제2차 대평의에선 앞서 문과대학·외국어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범대위가 비상대책위 원회로 전환되어 투쟁을 다시 전개 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 내용에 따

라 '범대위 재구성 여부'가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는 범대위 보단 대평의 안에서 법인을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시 대평의 길재호 의장직무대 행은 회의 결과를 두고 "대평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공식 구성원 대표 기구라는 데서, 범대위가 아니라 대평의 범주에서 새로운 비상 소위원회가 꾸려질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암 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 위원 구성 등을 비롯한 새 비상 소위원회 관련 사항은 15일 열릴 제3차 대평의에서 모두 의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평의가 새 비상 소위원회 구성

움직임을 보이자 범대위에 참여했던 일부 구성원 단체는 "범대위는 아직 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의사 결정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지부 손기경 지부장은 "지난해 법인과의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범대위라는 형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 이 맞다"며 "논의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 단체가 법인과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대위는 아직 해체되지 않았으며 당시 소속됐던 구성원 단체 대표들과 어떻게 범대위를 재구성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법인에도 법인소위원회와 같은 조직 구

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도 덧붙였다.

범대위는 법인과의 총장 선출제 교섭을 위해 지난해 11월 7일 구성된 조직으로, 당시 '대평의에 소속되지 않은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대학 본부 측 요청에 따라 구성됐다. 총동문회, 교수의회,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지부, 양 캠퍼스 학부 총학생회,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 범대위는 법인과 교섭을 통해 총장 선출제 단일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1월 22일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